

광주 일부 학생 원거리 통학...배정 잡음

광산구 945명·서구 419명 구 경계 넘어 통학 중학교 배정은 사전 노출 말썬...신뢰도 추락

광주 중·고교 입학 배정 결과 1천300여 명 학생이 자신이 사는 곳이 아닌 다른 구에 있는 고교를 다니게 됐다.

배정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중학교 배정 자료가 발표일 하루 전 홈페이지에 노출돼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달 31일 오전 9시 출신 중학교와 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2019학년도 후기 일반고 신입생 추천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48개 평준화 일반고에 배정된 신입생은 남학생 6천491명, 여학생 6천355명 등 모두 1만2천846명이다. 지난해보다 338명 늘었다.

신입생 배정은 선지원에서 정원의 20%, 후지원에서 80%를 성적 등급(3개 등급)을 고려해 무순위로 추천 배정했다.

선지원에서는 전체 평준화 일반고 중 2곳을, 후지원에서는 중학교별 대중교통으로 통학 거리 40분 이내에 있는 학교의 60%에 해당하는 곳을 지원하도록 했다.

학생들은 선지원과 후지원 희망학교에서 100%에서 배정됐다고 시교육청은 밝혔다.

그러나 학생에 따라 지원 가능 학교가 통상 5~7개, 최대 9개에 달해 희망학교 범위에서 모두 배정됐다는 설명은 큰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고교 수가 부족한 광산구 학생 945명, 여고가 부족한 서구 여학생 419명

등 1천364명은 구 경계를 넘어 통학하게 됐다.

광산구에서 원거리 통학하게 된 고교 신입생은 2016년 1천382명, 2017년 938명, 지난해 798명 등으로 감소했지만 올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한편 시교육청과 동·서부 교육지원청은

이날 오전 11시 중학교 입학 대상자 1만4천138명 배정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배정은 학군별 무작위 컴퓨터 추천 방식으로 지난 30일 오후 이뤄졌다.

중학교 배정 결과는 발표를 하루 앞둔 지난 30일 오후 6시께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바람에 학부모 사이에 혼선이 빚어졌다.

시교육청은 3시간여 만에 자료를 삭제했지만, 그 사이 자료가 공유되면서 행정 신뢰도가 떨어지는 결과가 생겼다.

광주시교육청은 2015년 2월 신입생 배정 결과 발표일에도 2시간가량 홈페이지 마비로 학부모들의 원성을 샀다.

당시 중·고교 신입생 배정 결과가 동시에 발표되면서 접속량이 폭주해 전산 장애를 일으켰다.

시교육청은 같은 실수를 막으려다가 다른 실수를 한 셈이 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접속 폭주에 따른 전산망 다운 등에 대비하려고 미리 점검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겼다"고 말했다.

/정승현 기자 jsh9668@



구지역 축사시설도 방역 비상

지난달 31일 광주 북구 양산동의 한 축사시설에서 광주 북구청 동물관리팀이 구지역 확산방지를 위해 방역하고 있다. /광주 북구청 제공

'광주형 일자리 반대' 민노총·금속노조 반발

투자 협약식 열린 광주시청 항의방문 시도...경찰과 몸싸움도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반대하는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현대·기아차 노조원들이 지난달 31일 투자 협약식인 열린 광주시청 앞에서 잇따라 항의 집회를 열었다.

이날 하루 현대·기아차 파업에 들어간 현대·기아차 노조는 광주시청 앞에 모여 광주형 일자리 사업 추진을 규탄하는 비상 결의대회를 열었다.

광주는 물론 울산과 화성 등 전국에서

모여든 현대·기아차 노조원 1천여명은 "자동차산업 파괴 노동권 부정 문제인 정부 일방통행 규탄"이라는 붉은색 현수막을 앞세우고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자동차 공장이 수익성을 내기 위해서는 최소한 30만대 이상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세워야 한다"며 "경차 10만대를 생산하는 공장을 짓겠다는 것은 보나 마나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꼬

집었다.

이어 "위탁생산하는 현대차는 경차가 안 팔리면 아무런 부담 없이 광주를 떠날 수 있다"며 "그 결과는 광주시민의 부채와 국민의 세금으로 떠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러한 입장을 광주시에 전달하겠다고 투자 협약식이 열리고 있는 시청사로 진입하려다 이를 가로막는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도 이날 오전 광주시청 앞에서 "광주형 일자리는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광주형 일자리는 고용 효과를 부풀리고 성공 가능성, 지속 가능성도 없는 정책"이라며 "국내 자동차 시장의 위기 상황에서 이미 포화 상태인 경차를 생산하겠다는 것은 셈법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취임 초부터 이야기하던 노동은 죽었다"며 "노동기본권을 파괴하고 재벌 천국의 신흥탄이 될 대국민 사기극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윤규진 기자 jin2001@

'선거법 위반' 이윤행 함평군수 당선무효형 지역 신문사 창간 비용 지원 혐의...향소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지역 신문사 창간 비용을 지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윤행 전남 함평군수가 향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광주고법 형사1부(최수환 부장판사)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군수의 향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군수에게 창간자금을 받고 중간지를 운영한 지역신문 주필 김모(72)씨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이군수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현재 군수로 군정을 수행하고 형이 확정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

은 되지 않았으며 2심에서 감형되긴 했으나 역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이군수는 2015년 말 지인들에게 신문사 창간을 제안하고 창간비용으로 5천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언론매체를 선거에 이용해 지지기반을 형성하고 공론화의 장에서 민의를 침해한 범죄로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향소심 재판부는 "기부행위의 공소시효 등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다만 기부행위 시점이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2년 6개월 전이고 보도가 주로 군정 비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실형은 너무 무겁다"고 밝혔다. /윤규진 기자 jin2001@

"박우량 신안 군수 불기소 부당"

매포소서 명함 배포 혐의 고발...주민들 재정신청

검찰이 6·13 지방선거 전 항구 매포소에서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고발된 박우량 신안군수를 불기소처분한 데 대해 주민 500여명이 재정신청을 제기했다.

31일 광주고법과 광주고검 등에 따르면 신안군 주민 박준용(57)씨 등 566명은 박군수를 상대로 한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적절하지 법원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로, 기소독점권을 가진 검찰이 자의적으로 기소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장치다.

박씨 등은 박군수가 지난해 설 연휴인 2월 15일 송공항 매포소에서 선거운동원 등록을 하지 않은 퇴직 공무원 등과 명함을 배포한 데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피의사실은 인정

되나 박군수가 초범이고 CCTV 등으로 배포 행위가 확인된 명함이 35장에 불과한 점, 명함을 받은 상당수가 선거구민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했다.

박씨 등은 박군수가 당시 5시간에 걸쳐 명함을 배포했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총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음에도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재정신청을 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군수가 초범이라는 것은 표현상의 착오인 것 같다. 선거용 명함 배포의 경우 50건 미만은 불입건 사안이며 당시 입증된 명함 배포 행위가 35건 이하 이를 기준으로 사건을 처분했다"고 밝혔다.

/목포·박성태 기자 tst5866@

'남친 이별 통보에 방화' 10대 여성 구속

남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화끈함에 불을 지른 10대 여성이 사건 발생 두 달여 만에 구속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자신이 거주하는 고시텔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 건조물 방화)로 백모(19)양을 구속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백양은 지난해 11월 22일 6시 50분께 광주 북구의 한 고시텔에서 가스레인지 위에 플라스틱 물체를 놓고 불을 낸 혐의

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백양은 함께 있던 남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고 집에 가지, 화끈함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25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가스레인지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화재감식 결과 받아 30일 이를 증거로 백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윤규진 기자 jin2001@

Sunshine GWANGYANG

희망찬 도약 새로운 광양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청년이 꿈을 이루는 희망도시,
여성이 안전하고, 어르신이 건강한

행복도시_광양